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영화 '극한 직업'과 수원 통닭 거리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한 영화 '극한 직업'. 개봉하자마자 이 영화를 관람하던 어느 치킨집 대표는 당장이라도 극장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조바심이 났다.

그는 수원 팔달구에 있는 '통닭 거리'에서 2017년 치킨집을 열었다. 주변에는 이미 수십 년 넘은 업력을 가진 치킨집 10여 곳이 성업 중인 상태라 자신만의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원 출신이었던 그는 수원의 명물인 왕갈비 양념과 치킨을 결합하기로 했다. 그렇게 '왕갈비 통닭'은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하지만 고객의 반응은 싸늘했다. 왕갈비 통닭을 찾는 고객은 하루 기껏해야 한두 팀. 결국 출시 3개월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수모를 겪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치킨집 대표는 2년 전에 접었던 왕갈비 통닭을 당장 부활시켰다.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 나갔다. 영화에 나왔던 음식을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치킨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열광하는 치킨 공화국 국민이 가만있을 턱이 없었다. 수원 토박이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치킨집은 문전성

시를 이루었다. 갑작스러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오전과 오후 각각 100마리씩만 판매하는 데 이르는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통닭 거리 상인들 특유의 유대감은 거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가마솥에 통째로 튀겨 내는 옛날 방식 그대로의 통닭에서부터, 새로운 세대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치킨에 이르기까지, 유행을 좇기보다는 저마다의 개성을 부각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통닭 거리는 1970년에 첫 번째 통닭집이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서울의 위성 도시로 성장한 경기도의 다른 시군과 달리 수원시는 서울-인천-수원이라는 수도권 삼각 벨트를 이루며 자립 도시로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당시 수원시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지금의 화성시 봉담읍)에는 수도권에 육계를 보급하기 위한 양계 농가가 많았다.

임금 노동자라는 충분한 수요층과 인근 양계 농가에서 보급되는 신선한 닭. 수원과 통닭의 인연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별다른 염치 없이 기쁨이 필필 끊는 가마솥에 노릇노릇 튀겨 낸 닭 한 마리. 그것은 때로는 노동으로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어 주는 서민의 술안주였고 때로는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해 주는 아빠

기 위해 노력한다. 상인들이 직접 출연해 영화를 패러디한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이는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통닭 거리 상인들 특유의 유대감은 거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가마솥에 통째로 튀겨 내는 옛날 방식 그대로의 통닭에서부터, 새로운 세대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치킨에 이르기까지, 유행을 좇기보다는 저마다의 개성을 부각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통닭 거리는 1970년에 첫 번째 통닭집이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서울의 위성 도시로 성장한 경기도의 다른 시군과 달리 수원시는 서울-인천-수원이라는 수도권 삼각 벨트를 이루며 자립 도시로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당시 수원시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지금의 화성시 봉담읍)에는 수도권에 육계를 보급하기 위한 양계 농가가 많았다.

임금 노동자라는 충분한 수요층과 인근 양계 농가에서 보급되는 신선한 닭. 수원과 통닭의 인연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별다른 염치 없이 기쁨이 필필 끊는 가마솥에 노릇노릇 튀겨 낸 닭 한 마리. 그것은 때로는 노동으로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어 주는 서민의 술안주였고 때로는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해 주는 아빠

의 반가운 선물이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100미터 남짓한 거리에는 15곳의 치킨집이 생겼고 수원의 성장에 비례해 그 규모 역시 늘어났다.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배후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수요층 그리고 도시의 성장. 수원 통닭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음식 거리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상인들 특유의 유대감이 더해졌다. 덕분에 거리 전체가 영화의 흥행과 함께 시작된 국민적 관심의 수혜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음식 거리 혹은 음식 골목이 있다. 이곳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지방 자치 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음식 특화 거리'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인 상인 스스로의 자각과 상생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식 특화 거리 사업을 모색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수원 통닭 거리의 사례를 면밀하게 관찰해 보실 것을 권한다. 기회를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준비된 자들의 몫이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노안,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다



문 귀형 보라안과병원 원장

지난 아찔던 단어는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든다.

우리 눈을 카메라로 비유했을 때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체라고 한다. 수정체는 먼 거리를 볼 때 두께가 얇아지고 가까운 거리를 볼 때 두께가 두꺼워지는 조절을 통해 시야를 확보한다. 노화가 시작되면 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때 가까운 거리가 잘 안보이게 된다.

노안은 40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나이가 들수록 조절력이 감소하지만 최근 3040세대의 노안 치료가 노안 발생 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중년안'이라는 단어가까지 생겨났으며, 따르면 20대부터 노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안이 발생하면 가까운 거리의 시야가 흐리게 보이거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눈이 쉽게 피로하고 두통을 느끼는데 젊은 연령대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눈 건강을 의심해 안경 착용 여부도 고민하며 내원했다가 노안으로 진단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직장인

들은 스마트폰과 PC 사용으로 근거리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눈의 노화가 오기도 하도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모니터, 스마트폰, TV 등에서 나오는 380~500 나노미터 사이의 파란색 계열의 광원)라는 불빛이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어 노안 발생 연령을 앞당기기도 한다.

최근 전자 기기로 인한 디지털 노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 등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전자 기기를 출시하는 기업에서도 블루라이트를 최소화했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울 만큼 노안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노안이 시작되면 가장 손쉬운 치료 방법으로 돋보기를 착용하거나 다초점 안경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연령층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최근에는 눈 상태와 연령을 고려하며 저시력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노안 라식은 일종의 찌름을 만드는 원리인데 주시안은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도록

교정하고, 비주시안은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도록 교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는 라식 라섹이 가능한 정도로 각막 두께가 충분해야 하고, 수술 전 렌즈를 착용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 후 노안 증상이 그대로 남아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했으나 현재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두 잘 보이게 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통한 노안 교정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특정 노안 교정술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연령, 안구 특성 등을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노안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눈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몸이 아프고 지칠 때 편안하게 쉬듯이 눈에 도 충분한 휴식을 주어 눈에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

지역 혁신 역량, 자치 분권의 길을 열다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선순위가 공공 기관 이전, 전략 산업 육성, 지역 혁신 체계 육성 등 지역 역량 강화였다면 현 정부는 중앙 정부 권한을 지역 정부에 대폭 이관하는 자치 분권을 강조한다. 그중 핵심은 지방 재정 확충이다. 현재 8 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6 대 4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 분권을 시행했을 경우 자치 단체별 상황과 역량이 달라 권한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다. 상존하는 지역 간 격차가 지방 분권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지방 정부 간 지나친 경쟁이 지방 정부의 지출 및 적자 재정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에서도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방 분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지만 현 정부의 지방 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초에 두 가

지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과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속원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앙 정부에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중앙 지원형이 아닌 자립형 지역 발전 계획의 모델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계약을 맺으면 여러 부처에 걸친 '정부 묶음 사업'이 가능해져 최적의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 다년간 포괄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역 지원 사업은 중앙 부처가 주도하면서 부처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새로운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분권 시대에는 지역 발전 의사 결정과 추진 과정이 지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지역 혁신 역량은 지역 발전의 핵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회단체, 대학, 언론 등과 같은 여러 혁신 지원 주체들이 지자체와 긴밀히 연결해 지역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로 특화하고 상상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델이라면, 지역의 개성과 역량이 발휘되는 지역 주도형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준비되어 있는 지역만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지방이 처한 문제 해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주민들의 관심과 해당 지역에서 해결 방안이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실현되거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마을 공동체와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지역 혁신 환경 구축도 중요하다. 올 한 해는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실천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社說

계엄군 사망자 기리는 비석 당장 철거해야

1980년 5·18 민중 항쟁 당시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군부대들이 작전을 하던 중 사망한 군인들을 '전사자'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대 내에 세운 충혼비에도 5·18을 '민주화 운동'이 아닌 '대침투작전'으로 새겨 넣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형물(사료) 처리 방안'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안의 추모비와 충혼비에 '광주 소요 진압시 전사'와 '대침투작전'으로 인한 '전사'로 기록했다. 20사단과 31사단 전사자 명부에도 당시 사망한 부대원들을 '대침투작전 전사자'로 기록해 놓았다.

군 인사법(軍人事法)은 전사와 순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국방부가 1980년 6월에 5·18 당시 사망한 군인들

을 유공 포상할 때는 공적 조서에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분류했다.

5·18 당시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분류한 것은 시민들을 '적군'으로 대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한 부대 아니고 여러 부대에서 똑같이 '전사'로 기록한 것은 실수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39년이 지났지만 군의 5·18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다.

올해로 5·18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았다.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진실 규명'에 목말라하면서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고 있다.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로 잘못 분류된 것은 목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순직'으로 고쳐야 한다.

공수부대원의 대침투작전도 정확하게 '민주화 운동'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군부대 안에 아직도 버티기 세워져 있는 충혼비는 당장 철거해야 할 것이다.

줄어드는 다문화 예산 뒤로 가는 정책 아닌가

광주·전남 지역의 다문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 절대 부족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교육도 부실한 편이다. 다문화 분야가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는 탓이다.

UN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무원의 이민·다문화 정책 교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4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29억 원의 32% 수준이다. 반면 정책 과제는 2014년 44개에서 지난해 62개로 크게 늘어 내실 있는 추진이 문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10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2014년의 105억 원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정책 과제는 54개에서 70개로 늘었다.

이민·다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문

화 담당 직원은 시도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1~3명 수준이어서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전남의 교육 수료자는 2016년 2373명에서 이듬해 700명으로 줄었다.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인 이미 전체 주민의 2%에 육박하는 6만 명을 넘어서다 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만 2만 7000명에 달한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수산업과 공장 현장의 일손 부족을 덜어 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아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출산 시대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들은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예요." 광주일보에 입사한 후 누군가 회사 주소를 물을 때면 괜히 부끄해지곤 했다. 광주시민들에게 '금남로'는 단순한 도로명을 넘어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심장부 같은 공간이어서다. 회사가 이전 할 때 이 주소를 두고 가는 게 많이 허전했다.

5·18현장이었던 전일빌딩은 지금 한창 리모델링중이다. 내년 3월 재오픈하는 전일빌딩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탄환이 발견된 9·10층은 원형보존해 '5·18 기념 공간'으로 조성하고 5·7층엔 문화콘텐츠 기업 등이 들어선다. 지하 1~4층은

전일빌딩

듣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꽃잎처럼 금남로에'로 시작하는 '오월의 노래'의 원곡인 '누가 내 할머니를 죽였다'였다. 프랑스 가수 미셸 플라레프가 만든 7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광주일보와 전일방송이 자리한 전일빌딩은 광주일보 근무자 뿐 아니라, 많은 광주시민의 추억이 어린 곳이기도 하다. 1970년 4월 개관한 남동도서관은 전국 최초의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새벽부터 물러드는 학생들로 늘 장사장이었다. 광주시민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전일다방이며 천정자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